

# 행복과 거시경제변수 관련성에 관한 小考

## - 행복 : 소비자심리지수를 대용변수로 활용 -

김 종 권\*

### 국 문 초 록

기존의 연구논문들에서는 1975년부터 1992년 사이의 OECD 국가들에서 집권정부별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들이 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행복감을 알아보는 데에는 특히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이 주요 변수로 활용되고 있다. 각국별로 살펴볼 때, 진보정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업률에 더 주안점을 두는 반면에 보수정부는 인플레이션율에 더 민감하게 대처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보면, OECD 국가들에서 빈곤층은 진보정부를 선호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에서 상위계층은 보수정부를 선호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경우 시계열 관계상 진보정부와 보수정부로 나누지 않고 행복감에 대하여 소비자심리지수를 대용변수로 사용하였을 경우 경기회복에 따른 산업생산 증가와 이를 위한 정부지출이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행복, 거시경제변수, 소비자심리지수, OECD, 인플레이션율, 실업률

## I. 서론

상당 수의 경제학자와 정치학자들은 정책의 경제성과(economic performance)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지 연구해 오고 있다. Downs(1957)의 논문을 시작으로 다수의 모형들이 나왔는데, 정책 입안자(policy makers)들이 선거에서 어떻게 유리하게 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논문들에는 Nordhaus(1975), Rogoff and Sibert(1988) 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다른 논문들은 정책입자들이 정당정치 유리성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당정치 관련 논문들에는 Hibbs(1977)과 Alesina(1987) 등이 있다. 이들 논문들의 특징은 다른 정당에서 다른 정책들을 선호할 것이라는 명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경기변동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들 정당별 다른 형태가 수 많은 논문을 생산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경기변동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도 있다.

\* 신홍대학 경상정보계열

향후 논문의 전개도 정당별로 다른 정책들을 선호할 것이라는 추정에서 진행될 것이다. 이들 다른 정책들에 따라 경기변동 양상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각국별 경제상황이 다른 국가들에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일관성의 유지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을 등이 각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각국별 비교는 데이터 수집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한국의 경우에만 집중하기로 한다. 이러한 논문들에는 Frey and Schneider(1978a,b), Golden and Poterba(1980), Hibbs(1987), Grier(1989), Chappell, Havrilesky and McGregor(1993) 등이 있다. 경기 상황이 좋은지 나쁜지에 따라 선거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은 Alesina and Roubini(1992)에 잘 나타나 있으며, 특히 인플레이션을 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Rogoff and Sibert(1988)에 이은 연속적인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각 개인들이 느끼는 행복감을 통하여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등 경제변수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와 관련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행복감은 효용(utility)으로도 간주할 수 있으므로 한국의 경우 효용(utility)의 대용변수(proxy)로서 소비자심리지수를 활용하기로 한다.

## II. 본론

### 1. 기존문헌 연구

각국별로 살펴볼 때, 진보정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업률에 더 주안점을 두는 반면에 보수정부는 인플레이션율에 더 민감하게 대처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보면, 빈곤층은 진보정부를 선호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에서 상위계층은 보수정부를 선호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러한 분석에는 각 정부별로 파악하여 보다 객관적인 사실에 접근하여야 한다. 이러한 각 정부별 분석에는 각종 경기판단 지표(aggregate economy activity)와 정부소비(government consumption)와 같은 거시경제변수와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이는 다시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과 연계되어 있고 결국 국민 각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과 직결된다고 판단된다.

다른 한편으로, 소득분포에 대하여 각 정부별 거시경제에 대한 정책의 상이함이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 지와 관련하여서도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Thurow(1970)과 Blinder and Esaki(1978), Hibbs(1987) 등이 포함된다.

Hibbs(1987)는 미국의 소득분포에서 실업률의 영향과 관련하여 분명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실업률의 증가는 차상위계층의 소득을 분명히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1980년대 중반에 걸쳐 각 정부별로 실업률 및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이었지만 실제로는 소득불평등도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논문들은 1975년부터 1992년까지의 OECD 국가들에서 집권정부별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을 알아보기 위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행복감을 알아보는 데에는 특히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이 주요 변수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각 개인들이 느끼는 집권정부별 행복감을 통하여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등 경제변수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와 관련하여 분석해 나가고 있다.

Easterlin(1974)은 미국의 경우 각 연도별로 분석하였을 때 소득 증가가 각 소득계층 모두에게서 행복감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결론을 지었다. 하지만 최근 각종 논문들에서는 이전보다 소득 수준이 증대하였지만 행복감이 더 증진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Easterlin(1974)에 대하여 최근 미국에 있어서는 'Easterlin 역설(paradox)'로 부르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이나 시점을 달리 하였을 경우에는 좀 더 다른 결과도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Inglehart(1990), Easterlin(1995), Blanchflower and Oswald(2000) 등이 이에 속한다.

한편, Di Tella, MacCulloch and Oswald(1997)는 OECD국가들을 통하여 각소득계층에 걸쳐 행복감이 소득수준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짐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OECD국가들 중에서는 복지가 잘 되어 실업수준이 낮은 국가(welfare state)들에게 있어서는 집권정부 정책에 따른 경기변동(business fluctuations)에 따른 소득수준 감소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행복감과 관련하여서 실업률 감소와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는 Clark and Oswald(1994), Winkelmann and Winkelmann(1998) 등이 이에 해당하고, 경기회복과 관련성이 높다는 연구는 Blanchflower and Oswald(1998)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Easterlin 역설(paradox)'과 관련하여서는 행복감이 소득수준 향상으로 증진된다는 연구가 Blanchflower and Oswald(2000)이 있으며 Granato, Inglehart and Leblang(1996)는 행복감이 민주화의 진전과 관련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Morawetz(1977)는 행복감이 소득불평도(income inequality)의 완화와 관련성이 높다고 보았으며, Frey and Stutzer(2000)는 스위스 주(Swiss cantons)들의 사례를 통하여 민주화와 관련성이 높다고 결론을 지었다. 그리고 Gruber and Mullainathan(2002)는 담배세 인상이 흡연자의 행복감 감소로 이어지는 지를 연구하여 공공정책(public policy)과 행복감이 높은 상관성을 가짐을 밝혔다.

Di Tella, MacCulloch and Oswald(2001)은 평균적인 행복감은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의 상승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음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행복감에는 사람들마다 느끼는 주관적인 척도가 다를 수 있고 각 소득계층마다 상위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행복감이 의미가 있는지 심도 깊은 고려가 있어야 한다.

Inglehart, Reich and Melich(1994)는 1975년부터 1992년까지의 유로-바로미터 서베이(Euro-Barometer Survey)를 통하여 집권정부별 사회적 행복감에 대하여 추정하였다.

주관적인 행복감과 관련하여서는 대체로 4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매우 만족과 비교적 만족, 보통, 만족하지 않음이 그것이다.

행복감과 관련하여서는 실업률과 같은 거시경제변수 이외에도 소득수준과 결혼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결과적으로는 실업률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줄어들음을 알 수 있었

고, 결혼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이혼보다 행복감을 훨씬 높게 됨을 시사하고 있다. 소득과 관련하여서는 소득수준이 매우 높게 형성될수록 매우 만족의 비율이 높게 형성되었고, 반대로 만족하지 않음은 현격히 줄어들었다.

선호하는 집권정부별 비교를 위하여 진보와 보수로 대상을 나누었을 때, 보수에 가까운 쪽에 사람들에게서 일반적으로 행복을 느끼는 비율이 높게 형성되었다.

실업률과 관련된 효과의 검증으로 살펴볼 때, 미국과 유럽 등 각국 모두 각 계층에 걸쳐 행복감 상실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각국들 모두에서 살펴본 결과, 세대별로 U자형의 그래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검증을 토대로 살펴볼 때,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보다 더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의 성향을 진보와 보수로 나누었을 때,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혼을 통하여 행복감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컸으며, 이혼을 통한 행복감의 상실은 보수 쪽이라는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남편 사망에 따른 과부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데 보수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보 쪽에 사람들 보다 행복감의 상실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 이혼에 따른 행복감의 상실은 실업률에 따른 것과 비교할 때 70%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진보적인 사람들의 경우 이보다 낮은 43% 정도를 나타내었다.